

데스크 시각

전당을 전당답게

(아시아문화전당)



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지난 2006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4.7대 1이었다. 당시 신입생 정원은 30명. 고급 문화인력 양성을 내건 국내 최초의 대학원이라는 타이틀 덕분인지 전국 각지에서 141명이 몰렸다. 이들 가운데는 2010년 개관 예정이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의 '입성'을 꿈꾼 지방생도 많았다. 한해 평균 재학생 정원이 30명인 점을 감안하면 그간 10여 년 동안 300여 명이 배출된 셈이다.

그렇다면 '그렇던' 학생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현재 전당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은 10여 명 안팎(정규직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1월 전당 공식개관과 함께 위탁 운영기관이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현 아시아문화원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당시 근무 인원 160명 가운데 70명이 계약 만료로 전당을 떠났다. 박근혜 정부가 아시아문화원이 요청한 최소한의 정규직 인원 200명

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광주 예술의거리 활성화 사업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는 조현희(40·광주도 시여행정 대표) 씨도 문화전문대학원 출신이다. 대학 졸업 후 여행업에 종사했던 그녀는 지난 2010년 다소 늦은 나이에 전당의 '주역'을 꿈꾸며 대학원에 진학했다. 하지만 졸업 후 그녀를 반기는 곳은 거의 없었다. 다행히 광주문화재단의 단기 사업 등에 참여하며 현장에서 '버터'였 덕분에 지금의 예술의거리 사업을 맡게 됐다.

'문화수도' 용두사미 되나

지난 2002년 '문화로 먹고 사는 광주'를 내건 노무현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조성사업)의 싹쓸한 현주소다. 핵심 시설인 전당의 사정이 이렇진대 전당의 에너지를 7개 권역으로 확산시키는 7대 문화권사업은 말해 무엇하랴. 예산, 인력, 조직, 콘텐츠 등 제대로 돌아갈 게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홀대가 빛어낸 '총체적 참사'다 하겠다.

그래서일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지역의 기대는 유별나다. 아니 절박하다고 해야 맞겠다. 전문가들은 조성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복원을 첫 번째로 꼽는다. 지난 2003년 이후 조성사업과 7대 문화권을 총괄해 왔지만 2015년 4

개 과 40명에서 1개 과 8명의 '미니 조직'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개관 이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당장 선임과 직급 승격도 시급한 사안이다. 4급 이상 공무원이면 지원이 가능한 현 '전문 임기제 가급'으로는 전당의 위상에 걸맞은 적임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구상했던 차관급 이상으로 격상해야 전문성을 갖춘 중량급 있는 인물을 영입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정원 제한에 묶여 비정규직으로 꾸려 가고 있는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형적인 조직도 수술 대상 1순위다. 최근 아시아문화원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6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E등급을 받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들러리 조성위' 탈피해야

무엇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의 정상화는 조성사업의 '핵심 퍼즐'이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조성위는 총리급의 위원장과 10여 명의 조성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스케일이 무척하게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했다. 초창기 조성사업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했지만 정부의 무관심에 전혀 쓴소리를 못 내 '들러리 조성위'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도약기에 진입한 조성사업을 위해선 조성위

가 사업 주체인 문화부와 문화전당 및 광주시를 중재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조성사업은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당연히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사업의 장밋빛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예산, 조직, 콘텐츠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 못지않게 7대 문화권 사업과 주요 현안을 풀어 가는 거버넌스(협치)가 필요하다. 근래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당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이 좋은 시험대다.

물론 옛 전남도청은 5·18 항쟁을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1980년 '그날'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데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상당 부분 변형이 된 현 상황에서 복원 과정의 예산과 전당의 운영 시스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전당 랜드마크 논란과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를 놓고 2~3년간 전면 중단됐던 전당 건립 사업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수년간의 논란으로 지연돼 조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두 번 다시 전당의 '잔혹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치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물쭈물하다간 큰일 난다. 문재인 정부의 5년도 결코 길지 않다. /jhpark@kwangju.co.kr

은편칼럼

용산 약수터 보존해야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용출량이 일정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그 물을 마시고 배탈 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약수터가 며칠 전 갑자기 사라졌다. 용산지구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매립해 버린 것이다. 지난해 용산지구가 동구청과 LH공사에 의하여 아파트 단지로 본격 개발되면서 폐쇄 조짐은 감지되었다. 첫 위기를 맞은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등산길에 보니 커다란 현수막에 용산 약수터를 2016년 8월 15일부터 영구폐쇄 한다고 게시되어 있었다. 그것을 본 주민들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모두 한마디씩 했다. 약수터를 영구 폐쇄한다니 그림 없애겠다는 것 아닌가? 나 역시 그것을 본 순간 어떻게 하던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소관 부서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마침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배너가 있었다. 우선 거기에 약수터 보존을 건의기로 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의도적이라고 생각지 않지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웠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민원을 올릴 수 있었다. 회원가입을 하려니 아이핀(i-pin)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했고 행차부 홈페이지에서 아이핀 발

급을 받으려니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다. 저절로 포기하길 바란 것 같았다. 그만둘까 하다 오기가 생겼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다행히 공인인증서가 있어 무려 2시간을 허비하고 '용산약수터를 살리시다'라는 민원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동구청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건의대로 용산약수터를 영구보존하기로 했으며 답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것이었다. 반가웠다. 동구청 관계자에게 수고했다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청장 답변을 출력하여 치마봉 정자와 약수터 옆 게시판에 게시했다. 오가는 사람마다 그것을 보고 동구청의 약수터보존 방침에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오후 용산약수터가 흔적도 없이 매립되어 버린 것이다. 동구청 재개발건축과에 전화를 해봤다. 담당자는 약수터 수질이 나빠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있어 없앴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구청장도

알고 있을까? 영구보존 하던지 지난번 답변은 뭐고 이제 와서 약속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없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적어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적(公的) 건의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개인의 민원처리가 아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수질이 나쁘면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약수터 자체를 없앨 일은 아니지 않은가? 자연은 보존할 때 개발 이상의 혜택을 줄 때가 너무도 많다. 개발논리에 밀려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유적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시아 문화 허브를 꿈꾸는 동구청의 행정이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편의 지향적인지 참으로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보존 의지가 있다면 매립한 흙을 다시 파내면 된다. 다행히 약수터는 아파트단지의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건축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다. 백여 평 정도만 약수터부지로 할애하여 아름답게 조성하고 보존한다면 향후 아파트단지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또 다른 광주의 명소가 될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



박현미 광주시 민생경제과장

#2. 40대 여성 B씨는 사업에 실패하자 급한 마음에 대부분채에서 21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여의치 않은 형편에 고금리의 대출금을 갚으며 힘겨워하고 있었다. 그녀도 상담과정을 통해 '바꿔드림론'을 알게 됐다. 27.9% 고금리 대출금을 10.5%로 전환할 수 있었고, 원리금 부담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지금은 여웃 돈을 저축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다.

위 두 사람은 채무로 인해 겪던 '절망'을 '희망'으로 바뀌나간 대표적인 사례다.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이기도 하다. 평범하게 살다가도 갑작스레 가족이 큰 병을 앓다가 빛을 지기도 한다. 잘못된 투자나 사업,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한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오르는 사례들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동구에서 인쇄업을 운영하는 한 60대 남성은 운영자금에 마련하기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로 3년 상환 2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광주시에서 이차 차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1년까지는 1%대 금리로, 2년째부터는 고정금리가 3.3%대 수준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다. 바로 광주시청 1층에 있는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다. 광주시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채무조정과 서민대출, 복지와 주거상담 등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2013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총 3800여명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채무조정과 재무 상담 1400여건, 복지주거상담 150건 등 총 1550여건의 상담과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이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미뤄 짐작하고 골장 고금리 대출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전화, 문자메시지, SNS에서는 대출정부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원 대출이라며 상냥한 목소

리로 전화상담을 하다가 일단 20%가 넘는 대출상품을 권하기도 한다. 3개월 동안 잘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이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고금리 대출사기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고사례는 4만6000여 건에 그 금액은 1900억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남성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경기불황이라는 가혹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피해를 입는다. 그건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것과 다름없다.

대출사가 피해가 의심되면 광주시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도 앞으로 센터가 더 활발히 운영되고 시민들이 서민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라 한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613-6700-3)를 통해 희망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社說

'탈핵 시대' 지역 에너지산업 도약의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시대' 선언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광주·전남 지역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엇그제 부산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어 가는 거버넌스(협치)가 필요하다. 근래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당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이 좋은 시험대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시대' 선언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광주·전남 지역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엇그제 부산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어 가는 거버넌스(협치)가 필요하다. 근래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당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이 좋은 시험대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시대' 선언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광주·전남 지역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엇그제 부산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어 가는 거버넌스(협치)가 필요하다. 근래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당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이 좋은 시험대다.

정치 현실 인정 협치의 코드로 전환해야

문재인 정부가 청문회 정국의 늪에 빠지면서 개혁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분위기다. 우선 '강경화-안경환' 파동으로 내각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려면 개혁 정책을 집행할 준비가 절실한데 임명된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 9명의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고, 3개 부처 장관은 아예 인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의 대치로 국회 상임위가 파행 운영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할 예정이었던 민생 법안이 폐류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27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자리 창출의 시발점인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정부조직 개편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정인 통일외교안

상해 전곡(3만7078GWh)의 2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고인 셈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여력은 충분한데도 그동안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미흡해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920MW로, 전국(3615MW)의 25.5%에 그치고 있다. 풍력발전 설비용량도 137MW로, 전국(853MW)의 16%에 불과하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전남에 선제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는 물론 한전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투자를 이끌어 낼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보 대통령 특보의 발언 논란이 겹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박지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그랜드 디자이너'가 없다"고 지적한 점은 새겨 볼 만하다. 여소야대 정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협치를 매개로 적폐 청산 등 시대적 과제를 이룰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세력들에게서 권력을 나누어 미래를 이끌어 가는 전략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정치적 현실이다. 여권이라면 이를 풀어낼 역량이 필요하다. 여소야대의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얼린 정국을 풀어 나갈 수 없다. 결국 한발 양보하는 협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 될 것이다.

無等鼓

오래전, 뉴질랜드의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를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도시 전체가 정원 같다는 것이었다. 도시 중앙에 자리한 해클리공원에서 아름드리 고목과 형형색색의 꽃을 배경으로 조경을 하거나 잔디밭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여유롭게 보였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에이브강은 개울처럼 작았지만 만년설이 녹아내린 강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그 속에서 카누를 닦은 작은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는 풍경은 너무도 평화로웠다. 뉴질랜드에 가장 아름다운 공원을 건설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중앙공원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서는 도심 공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다. 마천루 속에서 사는 뉴욕거들은 센트럴파크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싶어 한다. 이들은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 주변의 야생에서 봄을 느끼고, 메이플의 단풍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 센트럴파크는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 아래 조성됐다. 런던의 하이드파크와 파리의 불로뉴슈를 모델로 뉴욕시가

1853년 부지를 확보한 후 경관 설계를 했고 조경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했다. 1966년부터는 국가사적지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광주에도 중앙공원이 있다. 면적이 294만㎡로 센트럴파크와 비슷하고 온나시스 저수지와 같은 풍양호수(저수지)도 있다. 하지만 위상이나 처해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광주시가 중앙공원을 포함해 10개의 민간공원을 사업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추진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공원의 30%까지를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단지의 면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광주는 아파트 비율이 73.2%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녹지 비율은 41.8%에 불과해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에서 세 번째다. 화석 콘크리트가 광주천과 무등산의 바람길을 막아 열섬 현상도 자주 일어난다. 대구보다 더 덥다고 해서 나온 '광프리카'(광주+아프리카)라는 신조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 시 재정이 여의치 않다면 내셔널 트러스트 같은 시민 운동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